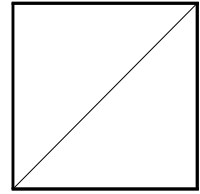


공개



의안번호	제 30 호
의 결 연 월 일	2022. 6. 27. (제 12 차)

보
고
사
항

자산유동화 제도개선을 위한 법규 정비방안 보고

증권선물위원회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소 영
제출 연월일	2022. 6. 27.

1. 보고주문

자산유동화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2. 보고이유

『○○○○○○○○○○○○○○○○유한회사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위반 조사 결과 조치안』과 관련하여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2022.3.10.) 심의 과정에서 자산유동화 제도상 미흡한 사항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증선위에 보고를 요망하였는 바, 이에 따라 보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자금 운용·차입 기준 명확화 (법률 개정)

- ☐ (현행) 자산유동화의 목적을 고려할 때 유동화전문회사의 여유자금 운용 또는 부족자금의 차입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 자산유동화법은 자금 운용·차입 시 유동화계획에 따를 것만을 요구하고 있고, 대상·방법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율은 부재
- ☐ (개선) 유동화전문회사의 자금 운용·차입과 관련하여 그 목적·대상·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나.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 강화 (법률 개정)

- ☐ (현행) 유동화전문회사는 명목상의 회사(SPC)로 실제 업무는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이 위탁받아 수행함에도, 이들에 대한 행위규율이 미흡
- ☐ (개선)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인이 지켜야 할 행위규율을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규율의 실효성 제고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위탁받은 업무의 未수행 금지
- 핵심 업무의 재위탁을 금지하고, 그 외 부수업무는 재위탁을 허용 하되 재위탁시 금융당국에 사후보고 의무 부과
- 상기 행위규율 위반 시 금융위에서 업무개선명령,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다.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 마련 (시행령 개정)

- ☐ (현행) 업무수탁인이 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조항이 부재
- ☐ (개선) 자기자본, 상근인력(전문인력 포함) 등 업무수탁인이 될 수 있는 제3자의 자격 요건을 신설

라.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작성책임 강화 (법률 개정)

- ☐ (현행)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허위 작성 시 벌칙 조항 부재
- ☐ (개선)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미기재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마. 여유자금 투자대상 사전 확정 (자산유동화업무처리서식 개정)

- ☐ (현행)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서식은 여유자금의 운용계획을 기재 토록 하나 그 운용 대상·방법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음
- ☐ (개선)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에 여유자금 운용이 가능한 자산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 붙임 >

<붙임>

관 계 법 규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①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를 제외한다)은 자산관리 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管理者**”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자산보유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3. 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제22조(업무) ①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유동화자산의 양수·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의 위탁
2.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6. 여유자금의 투자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제23조(업무의 위탁) ①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 기타 제3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2. 이사의 회사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3.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탁하기에 부적합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5조(업무개선명령)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관리자의 업무 운영에 있어서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범위 안에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관리자에 대하여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재산의 공탁 기타 업무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 1. 21.>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또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2. ~ 3. (생략)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표시를 한 자

<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

제19조(신고사항)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유동화전문회사등에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 자산보유자, 자산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인이 파산 또는 부도 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자산관리계약, 업무위탁계약 기타 중요한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이 있거나 계약조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유동화자산의 양도등과 관련하여 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소송의 제기 등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때
5. 유동화증권의 발행, 상환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기업공시국
연 락 처	02-2100-2691	02-3145-8090